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 및 겸직제도 강화
- (일본) 일본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지역발전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City of San Francisco) “피트 스톱(Pit Stop)”
- 사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공공위생시설

일본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개요

- 일본 인구는 2008년 이후 계속 감소,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도쿄일극집중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음.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
- 일본의 인구이동 요인과 시대적 배경을 고찰함과 동시에 이주지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 국에 대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인구이동의 요인

- 경로의존성 이론: 1945년 이후 일본정부가 도입한 산업집적정책의 관성에 의해 산업집적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는 힘이 작용하여 도쿄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이론
- Pull-Push이론: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방도시에서 도쿄로의 인구이동은 지역경제의 붕괴로 인한 Push형 인구이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style Migration):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 1990년대 이후 젊은층의 지방도시로의 이주 및 이주희망자는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주촉진정책의 변천과 시대 배경 (多田, 2016)

- 1960~1980년대 전반: 토지계획에 의한 지역 거점형성 및 지방의 산업입지정책이 이주촉진정책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음. 일부이긴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실현한 인구이동도 있었음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리조트 개발이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을 촉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음

- 1990년대 중반~2019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주촉진정책을 도입한 시기
 - 1990년대 및 2000년대 전반은 무역자유화(1995년 WTO)에 의한 농업진흥책의 실시,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비정규직 사원의 증가), 정년퇴직자의 귀농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이주촉진정책이 도입됨
 -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이주촉진정책을 실시. 특히,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의한 실업자의 증가 때문에 젊은층의 지방으로의 이주촉진정책을 도입. 지역활성화 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시골에서 일하는 모임(田舎で働き隊) 등이 대표적임
 - 2014년 이후: 지방창생정책 도입,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 제정(2014년 11월) 및 본부(2014년 12월) 설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이주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방으로의 이주인구는 증가하였음
- 2020년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가 도심부에서 교외 및 지방도시로의 이주를 촉진. 또한,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이 설립되면 재택근무를 어렵게 하는 결재서류에 대한 도장문화, 대면회의의 감소, 문서의 디지털화 등이 추진되어 재택근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으로의 이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이주지원촉진정책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제정: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과소화, 대도시의 과밀화를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적
- 지방창생종합전략은 5개년 종합계획으로서 4개의 추진 목표
 - ①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 ② 지방으로의 이주 유도
 - ③ 젊은세대의 결혼·출산·육아 권장
 - ④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지역생활권의 확대

| 표 1 | 주요 지원시책 및 프로그램

분류	제도 및 시책명	개요
이주 정주	지역활성화 협력대 (地域おこし協力隊, 総務省)	도시지역에서 소외지역으로 이주한(주민등록지 이전) 사람을 협력대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지방창생 인턴십사업 (地方創生インターンシップ事業, 内閣府)	동경권에 있는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출신지역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 대학 졸업후 지방출신의 인재들의 귀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분류	제도 및 시책명	개요
교류	지역활성화 기업인 (地域おこし企業人、総務省)	지자체가 대도시권에 있는 민간기업의 사원을 일정기간 받아들여 지역의 매력 및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향 워킹홀리데이 (ふるさとワーキングホリデー、総務省)	도시부의 대학생이 지방도시에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프로젝트 (子ども農山漁村交流プロジェクト、総務省、農水省、文科省、環境省)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목적
	농산어촌진흥 교부금 (農山漁村振興交付金、農水省)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숙박을 늘려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	이주·교류정보가든 (移住・交流情報ガーデン、総務省)	이주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원의 창구를 개설
	지방인재환류촉진사업 (地方人材還流促進事業、厚労省)	대도시권 출신 젊은층의 지방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출처: 国土交通省(2021)을 참고로 필자 작성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시마네현 고우츠시(島根県江津市) 사례

- 일: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Go-Con)를 개최,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역과제의 해결에 연계되는 플랜을 모집. 또한 일자리를 소개
- 주택: 빈집은행을 통해 주택소개 및 주택개조보조금 교부
- 각종 체험 및 교류사업에 대한 조성금 등

현황 및 시사점

- 청장년층의 지방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UIJ턴 지원정책: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다시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U턴, 도쿄 등 대도시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I턴,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출신지역의 인근 도시로 회귀하는 J턴으로 구분
-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활성화 협력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지방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관계인구 개념의 도입: 특정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이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과의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인구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음. 재택근무는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

참고문헌

- 多田忠意(2016)「移住促進政策の変遷と課題：鳥取県鳥取市の事例を踏まえて」『農林金融』, 18-35.
- 国土交通省(2021)「地方への移住・定住等の促進に向けた戦略的な支援や地域側コネクションハブの強化について」(<https://www.mlit.go.jp/common/001213277.pdf>).
- 島根県江津市(2021)移住支援情報サイト
(<https://www.kurashimanet.jp/lifestyle/shimane/municipality/goutsu.html>).
- 地方創生(2021)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総合戦略」「基本方針」
(https://www.chisou.go.jp/sousei/mahishi_index.html).

나성인 통신원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
nasungjin@shudo-u.ac.jp